野 '수박' 발언 금지령…계파별 인신공격 경고

우상호 "'수박'은 자기 모멸…저열한 언어 쓰지 마라"

"활발한 토론은 보장… 문자폭탄, 소통 아닌 공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된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내 여러 제도 문제, 혹은 정책·노선·비전 등에서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당의 주요 인사, 당직자,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한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며 "조심들 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수박'이라는 용어를 지목하며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냐"며 "심지어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니냐. 그런 저열한 언어를 쓰지 말아라"고 요청했다.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권장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정 좌표를 찍어서 특정 시점에 읽을 수도 없는 500~1000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건 조직화된 공격이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룰 변경 논의의 중심인 당내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의원 제도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 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말일 수 있기 □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폐지는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제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 출신 당원의 구성이 한때 90%까지 갔다. 그러다보니 당세가 취약한 영남은 지구당별로 당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 지구당도 있었다"며 "그것을 보완하려 만든 것이 대의원 제도이다. 대의원 숫자를 똑같이 가져감으로서 영호남 사이 당 주요 결정 과정의 소외를 막고자 하는 지역균형 전략의 일환이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는)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당원이 많이 늘어서 대의원과 당원의 비율이 1대 30 정도였던 것이 1대 90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며 당원 의견 반영 비율이 적지 않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이건 현상이고 제도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에 따른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는 신뢰의 위기를 꼽았다.

우 의원은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했다. /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환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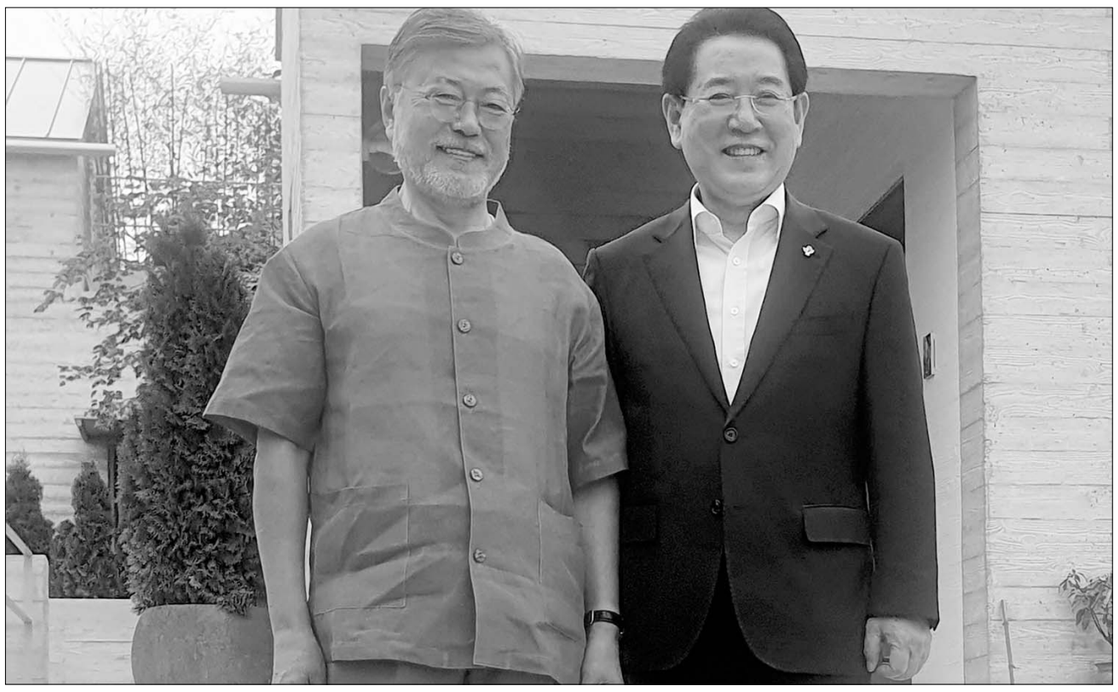
이날 방문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텃밭에서 고추, 유채 등을 가꾸며 건강한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 일행은 이날 전남 담양 대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에 앉아 함께 근무했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정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서 민주당이 최근의 어려움을 딛고 어르신 등 지지계층의 외연을 확대해 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시 공부에 매진한 해남 등 전남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환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환담을 나눴다. /전남도 제공

강대강 정면승부 택한 北 핵실험 결단 내리나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 행보 강행을 시사해 조만간 핵실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핵확장억제에 대한 강대 강 대응 방침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2일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논의 내용을 향후 이정표로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방역, 경제 과업 위주로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 대외 부문에서도 관련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대적 투쟁과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만 했다.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4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대외 관련 내용을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선 대남 대응을 '대적 투쟁'으로 지칭, 적대 강경 방침을 표현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을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기조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누리호 2차 발사 …비행모델 1~3단 총조립·결합 점검완료

항우연 "15일 오후 4시 발사 목표 현재까지 문제 없다"

우주개발 독립을 꿈을 실은 '누리호'가 오는 15일 2차 발사 목표 시점을 닷새 앞둔 현재 최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장영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체계개발단장은 지난 10일 '누리호 2차 발사 온라인 설명회'에서 "누리호 2차 비행모델 1~3단 총조립을 완료하고 결합에 대한 점검까지 완료, 기술적으로 점검은 마쳤다"며 "정기적인 확인 작업 중이며 오는 15일 오후 4시 발사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에는 누리호 기체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로 열려있는 점검 창도 막을 예정이다.

발사체의 발사장 이송은 발사 하루 전인 오전 7시께부터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장 단장은 "발사체가 발사대로 이송할 수 있는지는 비행시험위원회가 오는 13일(월요일) 저녁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발사 하루 전인 14일(화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사 당일인 15일에는 기상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우주환경 영향 등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발사 시각이 정해진다. 현재 발사 목표 시각은 오후 16시이며, 발사 장소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이다.

발사가 예정일에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지정해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뒀다.

항우연은 작년 10월 21일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는 데 가장 큰 신경을 기울였다. /뉴시스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에 한방 끼워넣기"…광주의사회 반대

신수정 의원 "한방진료 포함…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광주의사회가 광주의료원(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진료가 포함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광주의사회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수정 의원이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307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신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17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국가는 한의약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한의약 육성법을 토대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시돼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포함되는 법조항"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3일 오후 6시까지 시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의사회는 신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광주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3차병원 성격으로 1차 의원, 2차 중소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이다"며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고 민간 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감염병 진료, 재난의료, 예방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 계층의 치료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개정안은 한방의료를 끼워넣기 위한 것이다"며 "기획재정부의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

'30만원 돈봉투→1500만원 과태료'

광주·전남선관위 50배 검토…법원 확정판결 뒤 부과

광주와 전남선관위가 6·1지방선거에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등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토에 나섰다.

12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은 광주·전남 15건으로 선관위 1차 조사 뒤 경찰·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수사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곡성에서는 유권자 2명이 한 곡성군수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로부터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적발됐다.

이들이 기소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지고 선관위가 50배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담양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615만원),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이 모 후보 운동원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운동원은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 400만원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광주에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최대 30배를 적용해 총 1100여만원,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금품을 제공한 운동원과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文, 민주당 내홍 바람직하지 않다더라"

박지원 "구체적 정치인 문제 대해서는 소이부답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매일 싸우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영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양산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각오도 다졌다"며 문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수염을 기르셨더라. 그 앞에 꽹과리 부대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던지. '박지원이 왔다, 문재인하고 둘이 얘기한다'하고 참 소란스러웠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굉장히 평안하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도록 협력하자, 그러나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치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 소이부답 하셨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선 "특정인의 출마를 반대한다,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결국 정치는 민심이 지배한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벌써 했더라. 그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그런 거 보면 민심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도 있다"면서도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따지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지 않으냐.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권 도전 결정은 이 의원이 민심과 당심을 잘 살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14~16일 당선인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8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되는 당선인 워크숍은 역대 최저이자 전국 최저를 기록한 제8회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의 의미와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민주당 쇄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첫째날인 14일은 선출직공직자로서 소명과 의무를 상기하기 위한 강의로 구성됐다.

둘째날은 선출직공직자로서 본인이 선출된 선거구를 비롯해 소속 의회의 시급한 현안과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은 전·현직 지방의원의 특강을 비롯해 지방의회 혁신안 강의 등 여성과 청년이 대거 입성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만들어갈 혁신의회상을 그리게 될 예정이다.

호 매 만 평

이태헌